

# “제2 창당 수준으로 개혁...이제 ‘국민의당 시간’이 올 것”



## 안철수 대표 광주일보 단독 인터뷰

대선 패배 이후, 정치 생명을 건 도전을 통해 당권을 거머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표정에는 승자의 여유보다는 위기 극복의 절실함이 담겨있었다. 28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당의 결집과 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단독 인터뷰는 안 대표 당선 이후, 전국 일간지 가운데 첫 번째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 대표 당선 소회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당이 위기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당을 구하고 지방선거를 잘 치러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달라는 민심으로 받아들인다. 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바꿔 나가겠다.

-국민의당 재기의 최대 과제는.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 첫째는 제2창당 수준의 개혁을 해서 국민 마음을 얻겠다. 둘째는 전국의 인재를 폭넓게 영입, 이를 바탕으로 힘을 길러나가겠다. 또 정국회 때 선거제도 개편, 개헌, 민생법안 처리를 주도해 나가 국민과 당원에게 인정받겠다.

-제2창당 수준의 개혁이란.

▲당 혁신이다. 그동안 혁신위가 지도부 구성 체계를 상당부분 바꿨다. 대표가 힘을 가지고 개혁과 혁신을 할 수 있는 토대 만들었다. 그 다음 순서는 시·도당 강화다. 중앙당 인력들을 시·도당에 파견해서 소통을 강화, 당의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

-경선 과정에서 호남 중진들과의 갈등이 컸다.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호남 중진들과

저의 위기의식은 같다. 그동안 제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 그동안 당 외연 확대에 집중했다. 이제 내부 소통에 주력하겠다. 당권 주지들과 지도부 인사들은 물론 모든 원내외 인사들과 만나고, 듣고, 당 운영에 반영하겠다.

-정동영·천정배 후보들에게 맡길 역할을 생각 해둔 게 있는가.

▲구상이 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이분들이 당의 주요한 역할을 맡으셔야 지방선거 잘 치를 수 있다.

-국민의당의 시간은 오는가.

▲올 정국회 마무리될 즈음에 국민의당은 단단한 기반 위에 설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지난해 총선 지지율보다 더 높은 토대 위에 치를 것이다. 연말까지 두 자리 수 지지율도 가능하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 기준은.

▲진용이 짜이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연말까지 혁신해서 진용 갖춰지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광역단체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 줬는데 아직 유효하나.

▲당의 혁신이 마무리되고 진용 갖춰졌을 때, 당에 보탬이 된다면 결단하겠다. 하지만, 서울시장 등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실제로 서울시장 도전을 염두에 둔 새 인물들이 당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을 정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할 것인가.

▲당연하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 적극적 소통으로 당 결집·통합

### 서울시장 출마 거론 적절치 않다

### 정동영·천정배 의원 역할 할 것

다. 그리고 제 대선 공약이었다. 5·18 진상조사에 대한 저의 생각은 확고하다.

-여권과의 관계 설정은.

▲일방적으로 여권을 돕지 않겠다.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사안별로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 여권이 우리와 생각이 같다면 적극 지지하겠다. 그리고 반대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겠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다.

-문재인 정부 100일의 아쉬운 점을 든다면.

▲국가의 미래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정책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발표했다. 우선 민주적 절차 준수 하지 않고 있다. 둘째는 세부 실행계획이 미흡하고 허술하다. 특히 재정 분야가 심각한데 대총 넘어가고 있다. 셋째는 정책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개헌에서의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은.

▲4년 중임제 아래에서의 대통령 권한 분산, 권한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 없이 개헌은 절대 안 된다. 선거제도 개편이 없다면 양당 구도가 굳어진다. 중·대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 명부제 2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 두 제도의 조

합도 검토할 만하다. 중요한 것은 민심의 결과와 국회의 의석 분포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적 개혁 중도 노선을 설명한다면.

▲중도개혁 노선이지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밝히신 노선이기도 하다. DJ는 합리적 중도개혁 노선으로 IMF를 3년 만에 극복했다.

-시·도당이 부실한데 공천권을 줄 수 있나.

▲시·도당과 중앙당의 균형과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도당은 기본적인 체계 자체가 취약하다. 당직자들의 순환 근무 등을 통해서 시·도당을 강화하겠다. 공천 기준을 미리 발표하고 그 기준에 맞게 공천하는 시스템으로 상호 견제가 가능하게 하겠다.

-공천 룰은 언제 마무리되는가.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서 인재들이 몰릴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 정치 신인 30% 공천을 토대로 중앙당, 시·도당과 함께 인재 영입에 나서겠다.

-호남민심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 대선에서 많은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호남 정치의 본질은 기득권 세력과 싸우는 정의의 역사다. 지난 총선, 호남은 국민의당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치 판과 역사를 바꿨다. 하지만, 호남의 기대에 저희가 부응하지 못했다. 변화하겠다. 분골쇄신 노력하겠다. 실력을 갖추겠다. 지방선거도 경쟁으로 가야 한다.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경쟁으로 실력을 검증 받아야 한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담=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kwangju.co.kr /정리=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안철수 당 화합책 ‘호남 동교동계’ 끌어안기

### 호남 인사 포함 ‘탕평인사’ 전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과 양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화합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당 안팎에서는 안 대표가 화합책으로 일단 ‘탕평인사’와 대선평가보고서 공개 등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탈당까지 언급하며 자신의 전대 출마를 결사 반대했던 동교동계 원로들과 호남계 의원 등 당내 ‘반안’ (반안철수) 인사들을 끌어안지 않고는 당의 안정화를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28일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다”면서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함께, 정동영·천정배·이인주 후보와 함께 손을 잡겠다. 한분 한분 설득하고 손을 잡고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또 “제가 부족한 것은 사과하고 마음으로 노력하겠다. 하나로 뭉칠 동력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또 최고위 회의 주제에 앞서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최고위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대선평가 백서

를 공개하겠다. 당을 새롭게 혁신하는 좋은 재료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속한 대선 백서 공개 방침은 대선 패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조작 사건’ 파문을 둘러싼 책임론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심기일전해 새롭게 당을 재건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관건은 안 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당내 호남계 의원과 동교동계 원로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아직 안 대표의 당선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안 대표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반안’계 인사들이 안 대표를 흔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안 대표가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인 호남 민심을 감안, 지도부에 광주·전남·전북 출신 인사들을 골고루 포함하는 ‘탕평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안 대표는 이날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호남 등 특정 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청와대 ‘안봉근 파일’ 9308건 발견



### 제2부속실 사용 공유 폴더 문서

###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내용 포함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서 파일 9천308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문서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며,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파일의 경우 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의 문서 파일을 발견했다”며 “내용별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등 모두 9천308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문서 파일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발견된 문서가 생성된 기간의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다. 그는 제2부속비서관실이 폐지된 이후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 등의 전 정부 전산 공유 파일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통/합을 위한

# 2017 영호남

YEONGHONAM CULTURAL FESTIVAL

## 문화대축전

2017. 9. 1 (금) - 9. 3 (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

문화를 통한 교류의 장  
어울림을 주제로 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영·호남 특산물 전시 판매

주최·주관
광주일보사
매일신문사